



바르게 살지 못하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

김 혁/본지 기자

보통 사람들은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지역에서 봉사활동이나 하는 단체쯤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교통 정리를 하는 협의회원들의 가슴속에는 '순수함을 넘어선 '야심'이 존재한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원들의 진실한 모습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어쨌든 법안은 통과

9월 16일, 국회 내무위에서는 여야의원들 사이에 격렬한 옥탄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당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려 하자 단상으로 뛰어올라간 한 야당위원이 내무위원장의 입을 틀어막았다. 여당위원들이 이를 때어놓으려는 순간 다른 야당위원들이 온몸으로 저지하며 삼시간에 국회는 이수라장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직분을 잊지 않고 있었던 내무위원장은 일각의 틈을 이용하여 움켜쥐고 있던 의사봉을 힘껏 두드렸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사 끝이었다. "위원장님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안조차 말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라고 야당위원들이 격렬히 항의하였지만 "어쨌든 최종승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안은 통과된 것"이라는 여당측의 변명과 함께 바르게

살기 조직육성법안은 이미 내무위 소관을 벗어나 본회의로 훨훨 날아가 버렸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야당위원들이 이 법안에 대해 그토록 반대를 표명한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야당위원들에 의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 법안의 내용은 제3조 1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제4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다.

국회의원 비서관 오세환씨는 이렇게 말한

다. “우리나라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처럼 순수 민간단체를 표방하는 곳이 어디 한두군데 입니까. 모르긴 해도 수백개는 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 특정단체만을 법적으로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도대체 형평의 원리에 안맞아요.”

“더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당이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모두가 선거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5공시절 민간단체를 표방했던 사회정화위원회나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선거에서 얼마나 설치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그런데도 5공정권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법, 사회정화위원회법까지 제정해서 이들 단체를 합법적으로 지원해주었던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정화위원회가 그 전신

다른 것은 재껴두고서라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사회정화위원회의 후신이라는 말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의 눈살은 저절로 찌푸러지게 된다. 5공시절 사회정화위원회가 저절렀던 온갖 비리와 악행을 알 만한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정화위원회에 대한 금지 못한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사회정화위원회와는 일정한 간극을 두려고 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홍보실장 이민호씨는 이렇게 말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사회정화위원회를 계승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을 계승했는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사회정화위원회가 삼청교육대나 공직자 축출, 언론인 해직 등 일반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만한 일도 하였지만 거리질서 확립이나

소년소녀 가장돕기운동 등 좋은 일도 많이 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단체는 이 좋은 점을 계승한 것입니다.”

반면에 5공시절 사회정화위원회로부터 후독한 시련을 당해야 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인다. 민주당 인권위원회 최정석씨의 말에는 다분히 이성과 감정이 뒤섞여 있다. “내가 5공시절 사회정화위원회 놈들에게 어떻게 당한 줄 아십니까? 단지 야당하는 것 정도만으로 반정부운동으로 몰려서 물매를 얻어맞기 일췌였으니까요. 당시에 설치고 다녔던 그놈들은 생각만해도 머리끝이 솟구쳐 올라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고요. 사회정화위원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다른 게 대체 무엇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중 극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사회정화위원회 출신이란 말이에요. 또 그들이 거의 모두가 민자당직을 갖고 있고요.”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

현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전국적으로 15개 시도 단위협의회와 2백71개 시군구 협의회 3천5백개 읍·면·동위원회를 골간으로 하여 그 회원만도 약 12만명에 도달한다. 회원들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약사, 주부, 농민 등 매우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다. 협의회 측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을 근본 이념으로 황금만능주의, 무질서, 부조리 등의 만연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사회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해온 핵심사업은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과 ‘10%소비절약운동’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엄청난 호응이 있었다”라는 협의회측의 자찬과는 반대로 이들 운동에



지난 9월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동수 바른계 살기 중앙협의회 회장. 순수민간단체임을 역설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기까지 하다.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별로 탐탁치가 않다. 신림동에서 구로동으로 출퇴근한다는 셀러리맨 이상우(30)씨는 이렇게 말한다. “평소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들이 선거때만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지 속이 너무나 편히 들여다보여요. 이쪽 건널목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원 또 저쪽 건널목에는 새마을부녀회원 등 요새는 교통순경이 없어도 교통정리가 잘 될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런 활동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사회정화위원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승했다고 자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알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서는 불충분하다. 위와 같은 활동은 협의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의회가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활동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별로 알리고 싶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다.

진실은 어떤 것

협의회는 지난 기초의회선거에서 7백40명이 출마하여 6백25명이 당선되었다. 또한 광역의회선거에서도 1백24명이 출마하여 95명이나 당선되었다. 양대선거에서 당선비율이 무려 85%를 상회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장 김동수씨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원들이 그만큼 지역사회의 유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보고서
진실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대개의 경우 진실은
깊숙한 곳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로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던 것의 결과라고 봅니다.” 반면 홍보실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활동이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까봐 선거기간에는 특별히 모든 활동을 정지 시킵니다. 회원들에게도 누구를 찍으라고 강요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민자당을 지지하지만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적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포구 신수동장 황경술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협의회가 전혀 선거운동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위임을 알 수 있다. “제가 관장하고 있는 직능단체(관의 공식조직)가 무려 6개나 되요, 통장,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방위협의회, 체육회, 새마을부녀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단체의 회합이나 모임이 있을 때는 여기에 꼭 제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기초의회선거 때에도 저회동에서는 새마을회장과 예비군 중대장이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선거과정에서 이들 6개 직능단체가 상호 협조한 것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습니까? 단지 이런 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다보면 친분도 생기고 하니까 알아서들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러한 관변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센터에 쉽사리 걸려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관변단체 회원들 모두가 민자당적까지도 아울러서 가지고 있는 이중성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선거와 관련된 모임을 갖는 경우에도조차도 명목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므로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경우도 예외없이 전체 회원중 90% 이상이 민자당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선거때만 되면 부정선거고발센터다

공정선거감시단이다 해서

선거부정을 막아보려 하지만

'부정선거'라는 과물은

전국을 휩쓸고 다니는 악령으로 변한다.

부정선거의 온상지는 어디인가?

협의회에 씌리는 의혹들

현재 여론과 야당이 가장 크게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협의회의 예산에 대한 문제이다. 협의회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액수만 하더라도 89년에 국비 1억6천여만원, 지방비 36억5천여만원, 90년도에 국비 7억원, 91년도에 국비 15억원, 시·도비 2억9천여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에 이러한 공식예산보다 훨씬 많은 자금이 비공식적으로 협의회 등의 관변단체로 흘러들어갔음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즉 12월 6일자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가 새마을운동중앙본부와 바르게살기협의회에 각각 1억2백55만원과 1억8백46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각각 12억4천95만원, 7억1천2백46만원 등 원래 책정된 금액보다 거의 열배나 초과되었음이 드러났던 것이다.

그렇다면 원래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디로 증발한 것일까? 그 해답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이들 관변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